

[성명]

## 민주당에 묻는다

### - 민주시민의 뜻,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무산시킬 것인가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19일로 심의를 연기하였다. 서울시민 10만의 서명과 교육계 안팎의 지지, 학생들의 열망이 담긴 주민발의안은 19일 오전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처참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의 책임을 일차적으로는 비상식적, 반인권적 논리를 들이대며 소모적으로 논의를 지연시킨 한나라당 정문진 의원을 비롯한 보수 교육위원들에게 묻는다. 이들은 보수단체들이 권위주의적 교육으로의 복귀와 정치적 목표를 위해 억지스레 만들어낸 논리를 앵무새처럼 읊느라 민주교육과 학생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보수 교육위원들은 그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정도의 해괴망측한 망언을 일삼으며 학생의 존엄과 소수자의 인권을 공격했다. 이들에게 서울 교육의 운명이 내맡겨져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당론조차 결정하지 않은 민주당과 말을 바꿔가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심의의 보류를 결정한 김상현 교육위원장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한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의 박재웅 교육위 부위원장은 한나라당과 구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반민주, 반인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결집된 것이다. 애초 인권과 교육의 논리로 만들어가야 할 이 조례안은 보수단체들의 억지와 총공세 속에 피할수 없이 '민주 대 보수'의 구도 안에 빨려 들어가 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무참히 할려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강행했던 이들, 학생·교사의 인권과 학교 민주주의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권위주의적 교육을 부활시키려는 이들, 특정 종교를 강요하며 학교를 선교의 텃밭으로 삼으려는 이들, 교육과 종교의 이름으로 소수자들에게 대한 차별과 모욕을 지속시키려는 이들이 아닌가.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무산 위기에 즈음하여 민주당에게 묻는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교육을 바라는 서울시민의 뜻을 저버릴 것인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실패한 보수들에 휘둘러 학생인권조례 무산을 시작으로 민주주의와 교육혁신의 후퇴로 가는 교두보를 넘겨줄 작정인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제정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경기도와 광주에도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전국 각지에서 서울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시민의 뜻이 결집된 주민발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부당한 가위질로 민주시민의 뜻을 왜곡,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만약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되거나 개악된 내용된 제정된다면 그 결정에 함께 한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과 민주당에 대한 심판 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의 결단을 기대한다.

**2011년 12월 1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